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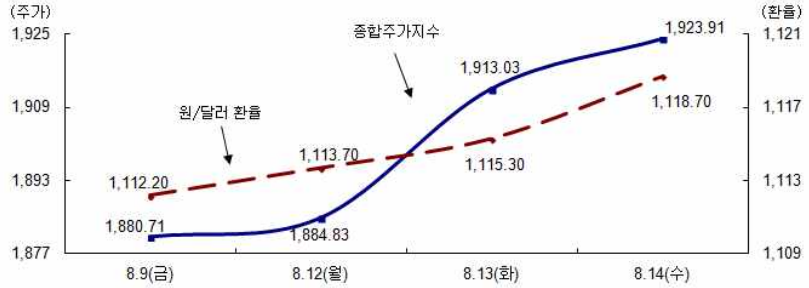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 중국경제 성장둔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9~8.14)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한 재 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중국경제

최근 중국 경제는 5분기 연속 7%대의 성장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그림자 금융 및 지방부채 확산 등 돌발 리스크 발생 우려가 확대되면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과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시진핑 정부 들어 '리코노믹스(Likonomics)'를 통해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을 진행 및 계획을 강해하고 있어 향후 성장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 7대 분야별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정책 전망과 평가

중국경제의 7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전환 지연에 대한 정책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업 확대, 최저임금 인상, 감세 등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분간 교통인프라, 도시화 등에 따른 투자 중심의 성장이 전망된다. 둘째, 고부가 산업 재편을 위한 정책 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고부가 산업 재편에 관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가 2020년 혹은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개혁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업무 범위 제한, 금리 자유화 등 금융 개혁뿐 아니라 예금보험제도 등으로 금융 안전망 개선은 기대되나, 금융선진화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과잉 투자, 부동산 버블 등 버블 해소에 대한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조선업 등 과잉 투자 분야뿐 아니라 주택매매 차익 과세 강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자칫 연관 산업의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다섯째, 경제 양극화 심화 해소 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 노동인구의 도시 호적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는 일부 효과가 기대되나, 지역별 산업분배를 통한 지역격차는 주요 지역에 대한 산업클러스터 편중 심화로 오히려 지역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 여섯째, 인구보너스 약화에 대해 산아제한 규제 완화는 일부 효과가 기대되나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생산성 하락은 소폭 개선되나, GDP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정계 및 사회에 만연하는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도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부패 법안 마련, 공직자 비리 척결 등 사정작업 강화는 예상되나, 공산당 내 정파 간 권력다툼 심화가 우려된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상기 7개 분야 모두 정책적 효과는 미흡·실패하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제 버블 해소, 부패 방지 등 2개 분야는 구조 개혁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적으로 미흡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수정이 성공한다면 지속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못한다면 경착륙 가능성도 상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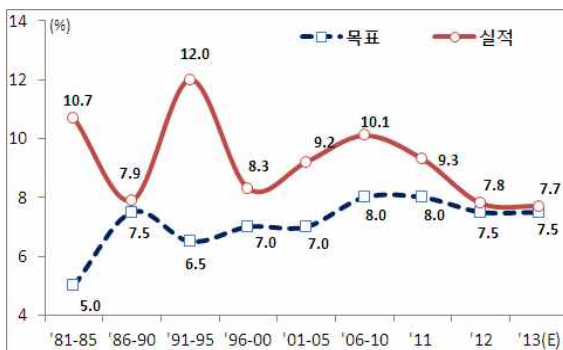
■ 시사점

對中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경제도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실패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한 상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對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화 및 지속적인 해외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돌발적인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 기업들은 중국 경기 둔화 지속에 대비한 컨틴전시 프로그램(비상경영 프로그램)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돌발 리스크 확대에 따른 중국의 경착륙에 대비해 중국 현지 국내기업에 대해 사전적인 자금조달 지원책도 준비해야 한다.

1.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중국경제

- 최근 중국 경제는 5분기 연속 7%대의 성장에 머물며 경착륙 우려가 제기 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에 봉착
 - 최근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으로 5분기 연속 7%대 성장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도 봉착
 - 올해 2013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7.5%로 지난 2012년 2/4분기 7.6%이후 5분기 연속 7%대 성장에 머물며 중성장 시대 진입 가시화
 - 또, 30년간 중국경제는 고도의 성장을 이어왔으나, 최근 소비둔화, 과잉투자, 금융 불안, 소득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에 구조적 문제에 봉착
 - 더욱이 최근 그림자 금융 및 지방부채 확산 등 돌발 리스크 발생 우려가 확대되면서 경착륙 가능성 논쟁도 제기¹⁾
 - 돌발 리스크 확대로 올해 성장 목표치 7.5%를 하회할 경우 경착륙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논쟁 과열
 - 이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리코노믹스(Likonomics)²⁾를 통해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분야별 큰 변화가 예상됨
 - 향후 성장 전환, 산업 재편, 금융 선진화, 경제의 버블 제거, 경제 양극화 해소, 노동생산성 확대, 부패 방지 등 7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전망

< 중국 경제성장 역대 목표치와 실적치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OECD.
주 : 2011년부터는 연간 목표치와 실적치.

< 중국경제의 7대 구조개혁 방향 >

구분	구조개혁 방향
성장 전환	수출에서 소비중심 성장
산업 재편	고부가치환경 산업재편
금융 개혁	금리 등 가격개혁, 자본시장 개방
경제버블 해소	과잉 산업 분야, 부동산 규제
양극화 해소	농촌주민 소득향상, 중서부 개발
노동인구 감소	산아제한 완화
부패방지	부패법안 마련

자료 : 中國國務院, 中國發展計劃委員會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해석.

- 1) 중국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지난 2011년 7월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뉴욕대 교수가 2013년 이후 중국경제가 구조조정과 경기둔화에 직면하면서 성장률이 5~6%로 떨어질 가능성이 40% 이상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2)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신조어로 중국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단기적 성장보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기조를 의미. 지난 7월 24일 리코노믹스는 민간의 철도건설 투자 개방, 소기업 세금감면, 수출기업 통과 간소화 등 3대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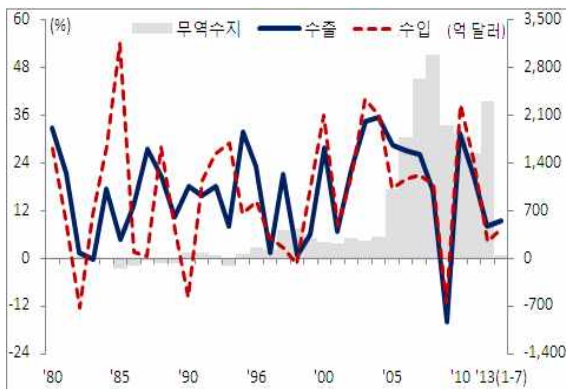
2. 중국의 구조개혁 정책 평가

① 수출에서 소비중심의 성장전환 지연

○ 12차 5개년 계획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출중심에서 소비중심의 성장이 지연되면서 향후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됨

- 지난 30년 동안 중국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부문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 지속
- 중국의 외수경기는 지난 2012년 이후 급격히 냉각되어 지속 하락
- 더욱이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중국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中國統計年鑑, 中國海關.

<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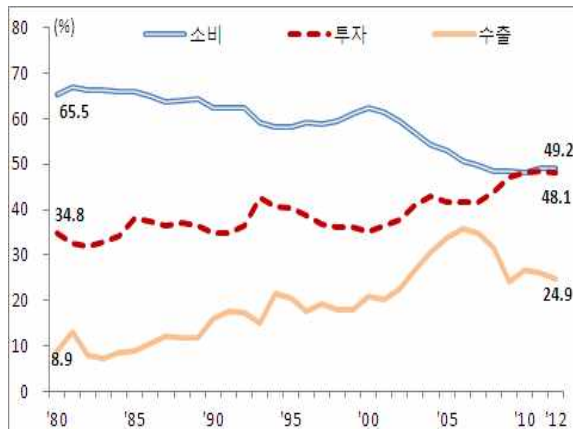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P)	2014(P)
미국	1.8	2.2	1.7	2.7
EU	1.5	-0.6	-0.6	0.9
일본	-0.6	1.9	2.0	1.2
ASEAN-5	4.5	6.1	5.6	5.7
세계	3.9	3.1	3.1	3.8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3.
 주 :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국가를 말함.

- 더욱이 중국정부가 계획한 소비중심의 성장 전환도 동반 지연
- World Bank(2013)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2011~2015년 사이(12차 5개년 계획 기간) 전체 GDP 대비 투자는 42%, 소비는 56%로 전망³⁾
- 하지만, 2011~2012년 간 GDP 대비 소비, 투자의 비중은 각각 49%, 48%에 머물고 있어 소비 중심의 성장이 지연
- 더욱이 소비의 GDP 기여도도 2011년부터 2년간 투자를 초과했으나, 2013년 2/4분기부터 10분기 만에 투자보다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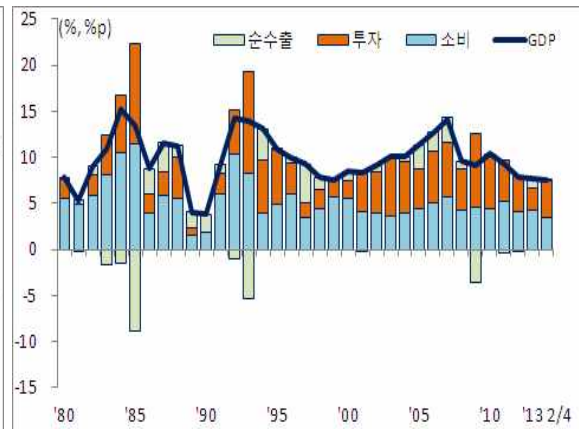
3) World Bank,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Society, 2013.

< 중국 GDP 대비 소비, 투자, 수출 비중 추이 >



자료 : IMF, WTO, CEIC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가공.

<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기여도 >



자료 : CEIC.

○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은 서비스업 확대, 소득 향상 등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예상되나, 실질적으로 투자가 향후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고부가 서비스업 확대, 최저임금 인상, 세금감면 등 소비 촉진 정책 추진 확대 전망
 -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 동안 서비스 산업은 전통 서비스업에서 금융, 물류 등 고부가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계획
 - 2012년 2월 “취업촉진계획(就業促進規劃,2011-2015)”에서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13%씩 인상을 목표하고 있어 소득 증대 효과 기대
 - 올해 7월에는 소비 부양을 위해 2015년까지 전국 600만여 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정책도 마련 예상
- 하지만, 12차 5개년 계획대로 지방별 철도, 고속도로, 물류 등 인프라 기초 투자와 도시화 건설로 오히려 투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큼

② 산업 고도화 지원

○ 중국은 새로운 혁신 시스템 부재로 고부가 서비스업, 제조업 전환이 지연

- 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증가하나, 고부가 전환 지연
 - 2011년 서비스업 비중은 44.6%로 제조업 45.3%에 근접했으나, 여전히 요식업, 도소매업 등 저부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

< 중국의 GDP 대비 제조업,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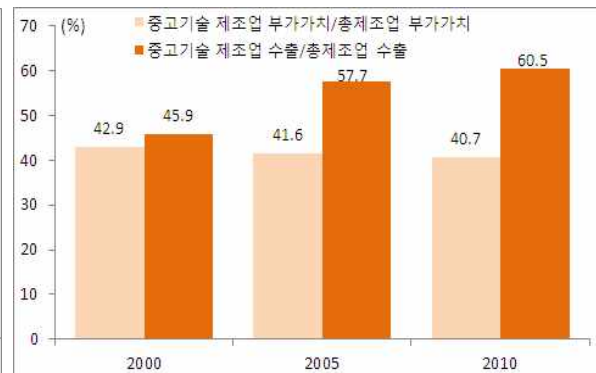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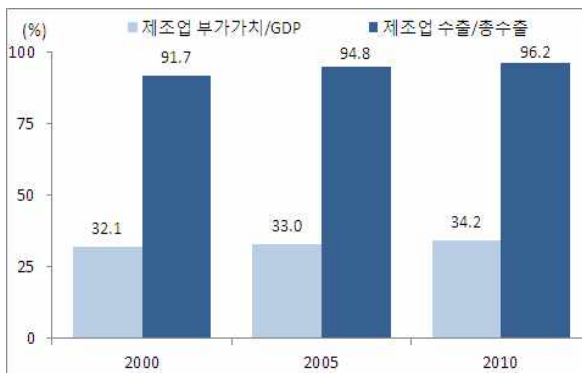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제조업 비중	45.9	44.8	46.2	47.9	47.4	46.7	45.3
서비스업 비중	39.0	41.5	40.4	40.9	41.8	43.2	44.6
기타 비중	15.1	13.7	13.4	11.2	10.8	10.1	10.1

자료 : CEIC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가공.

- 더욱이 고부가 제조업 수준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
 - 2010년 현재 중국의 총수출중 제조업 수출 비중은 96.2%로 한국 96.9%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준
 -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34.2%로 태국 36.6%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 하지만, 총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중고 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40%대로 독일(57%), 일본(54%)에 비해 낮은 수준
 - 총제조업 수출 대비 중고 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도 2010년 약 61%로 증가했으나, 경제수준이 비슷한 일본(80%), 독일(72%)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및 수출 비중 >

< 중국 중고기술평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



자료 : UNIDO(2013)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가공.

주 : 제조업 기술 분류는 SITC 3단위를 기준, 자원기반(Resource based), 저기술(Low-technology), 중기술(Medium-technology), 고기술(High-technology) 등 4가지로 분류.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향후 2020년까지 산업구조를 친환경, 고부가가치형으로 재편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다수 중장기적인 과제로 단기적 성과는 미약할 전망
 - 시진핑 정부들어 12차 5개년 계획대로 구체적인 산업구조 재편안 제시
 - 2012년 7월 “12차 5개년 계획 국가 전략 신흥 산업 발전 계획”을 통해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등 7대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구체적 정책 제시

- 2013년 1, 2월에는 철강, 조선, IT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안 제시, 3월에는 신에너지, 생명과학, 우주·항공 등 7대 기초과학 분야 육성案을 연이어 발표
- 4월에는 2022년까지 전국 27개성의 95개 노후산업 단지를 친환경 과학기술 단지로 재편 계획도 제시

< 중국 산업 재편 방향 >

산업구조 재편 목표 (친환경·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	최근 산업 구조조정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능력 제고, 신기술 개발 - 세계 첨단 기술 R&D 센터 구축 - 친환경 저탄소 산업육성 -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한 산업 재배치 - M&A 지원, 중소기업육성 등 전략 추진 - 반독점법, 가격법 등 경쟁법 강화 - 에너지 절감형 산업 육성 - 3D 프린팅 등 첨단 제조업 분야 육성 - 만인(萬人)계획 등 과학기술 인재양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7월 : 2020년까지 국가의 7대 전략 신흥 산업 목표 발표(12차 5개년 계획) - '13년 1월 : 자동차, 철강, 조선, IT 등 9대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 재편안 발표 - '13년 2월 : 기계, 에너지, 석유화학, 철강, 전력 등 9대 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 재편안 제시 - '13년 3월 : 2030년까지 신에너지, 생명과학, 우주·항공 등 7대 기초과학 분야 육성계획 발표 - '13년 4월 : 2022년까지 전국 27개성의 95개 노후산업 단지 재편 계획 발표

자료 : 中國國務院, 中國發展与改革委員會, 中國工業与信息化部.

- 하지만, 대부분 시기가 2020년,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가 다수여서 단기적인 구조 개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③ 금융시스템 선진화 미약

○ 중국 금융시스템은 국유 은행 중심의 대출구조, 가격통제 등 자금조달 시스템 뿐 아니라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 안전망이 미약한 수준

- 중국은 국유 상업은행⁴⁾의 대출 편중과 가격통제 등 자금조달 시스템이 미약한 수준
 - 중국 총대출 중 대형은행 대출 비중은 2012년 현재 65%로 지난 2000년 83%년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나타냄
 - 더욱이 최근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으나, 예금 금리 상한선 통제 등으로 자금유통이 제약 상존

4) 국유 상업은행이란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등을 의미함. 상기 5개의 국유은행은 지난 2003년 주식제 개혁을 통해 일부 민영화됐으나, 여전히 정부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중국의 대출총액 대비 국유 은행 대출 비중 >



자료 : CEIC, 각 은행의 연차보고서.

< 중국 예·대출금리 규제 현황 >

구분	예금 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	하한선
2004년	기준금리			기준금리의 10%
2012년	기준금리의 10%	폐지	폐지	기준금리의 30%
2013년				폐지

자료 : CEIC.

- 더욱이 금융관리감독체계가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분야⁵⁾로 나뉘어져서 통합적인 금융감독이 미흡
 - 중국 금융감독체제는 지난 2003년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 은행, 증권, 보험 등 4 분야로 관리감독기구가 분류됨
 - 하지만, 시중 은행의 자산운용상품(WMP) 업무 등 부외거래가 성행⁶⁾하며, 독립적인 금융감독이 어려운 양상을 보임
- 향후 중국정부는 은행의 증권업무 제한, 금리·환율 자유화 등 금융 개혁뿐 아니라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금융 안전망 개선에는 일부 효과가 예상되나 금융 선진화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올해 안에 은행들의 투자은행업무 통제가 예상
 - 올 하반기부터 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감독강화와 중소기업 대출 지원 및 생산과잉 업종 대출 규제 추진 전망
 - 중국의 금리 자유화는 2002년 중국통화정책집행보고서(中國貨幣政策執行報告)에서 제시된 “先외화 後위안화, 先대출 後예금, 先장기·거액 後단기·소액” 계획대로 2017년 예금 금리 상한선 폐지 전망
 - 또한, 2020년까지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추진 등 자본시장 개방화 계획하고 있으며, 2013년 내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 안전망 강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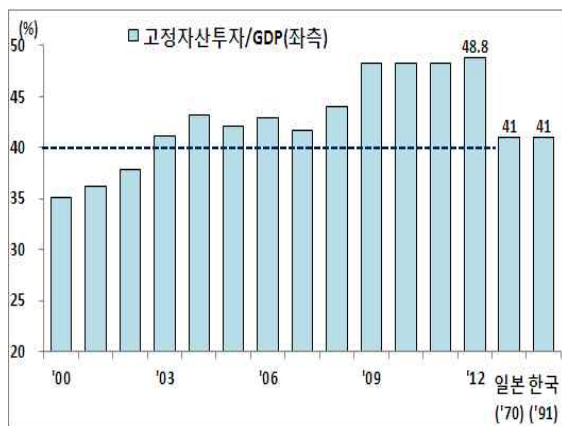
5) 은행업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銀行監督管理委員會), 증권업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證券監督管理委員會), 보험업은 보험감독관리위원회(保險監督管理委員會)에서 관리감독함.
 6) 최근 은행들이 고수의 창출을 위해 자산관리상품(Wealth Management Product) 업무, 위탁대출, 신탁대출, 은행 인수어음 등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activity)가 증가하며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확산문제가 나타남.

④ 경제의 버블 형성

○ 최근 2008년 이후 과잉 투자 현상이 지속될 뿐 아니라 부동산 버블 등 경제 버블 확산 지속

- 지난 2008년부터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과잉 투자 양상 지속
 - 중국의 GDP 대비 고정자산투자 비중은 2012년 48.8%로 지난 10년간 40%를 상회하며 1970년 일본과 1991년 한국 수준을 초과
- 더욱이 북경, 상해 등 일부 대도시에서 부동산 버블도 심각한 수준
 - 북경, 상해 등 중국 주요 도시의 2012년 현재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은 각각 약 19배, 15배로 뉴욕, 런던 등 국제 도시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
 - 국제 주택 구매능력 평가 보고서(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⁷⁾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이 3배 이하일 경우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

< 중국 고정자산투자/GDP 추이 >



자료 : CEIC, 中國電力企業聯合會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2012년 중국과 국제 도시의 PIR 비교 >

구분		PIR(배)	
		2005	2012
중국	북경	12.9	18.8
	상해	13.6	14.8
	천진	10.8	9.9
국제 도시	뉴욕	7.9	6.2
	LA	11.2	6.2
	런던	6.9	7.8
	벤쿠버	6.6	9.5

자료 : CEIC, ADIHAS2006, 2013)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인용.

- 주 : 1. PIR = 평균 주택가격(100m²당) / (1인당 가처분 소득 x 가계당 평균인구).
- 2. 가계당 평균인구는 2011년 기준.

7) 9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2006, 2013).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최근 조선업 등 과잉 투자 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규제도 기존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경기 둔화 우려도 상존
 - 과잉투자 분야 등 버블 확대에 대한 지속적 조치 단행
 - 중국국무원은 최근 과잉생산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조선, 유리 등 5개 분야뿐 아니라, 풍력발전, 태양광, 신소재 등 신성장사업 분야에 대한 관리안 발표
 - 지난 8월 4일, 과잉생산이 많은 조선업에 대해 2013~2015년까지 3년간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산업 업그레이드 방안(船舶工業加快結構調整促進轉型升級實施方案)'을 제시
 - 부동산 시장은 버블 확대 우려로 중국정부의 주택매매 차익 과세 강화 등 규제 지속 예상
 - 하지만, 규제 강화는 단기적인 버블 심화 우려는 해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경기 둔화를 야기할 수 있음

⑤ 경제의 양극화 심화

- 중국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및 지역간 소득 불균형 해소 지연
 -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2년 현재 0.47로 지난 1980년 0.30 이래로 30년간 소득불균형 확대에 따른 빈부격차가 지속 확대

< 중국 지니계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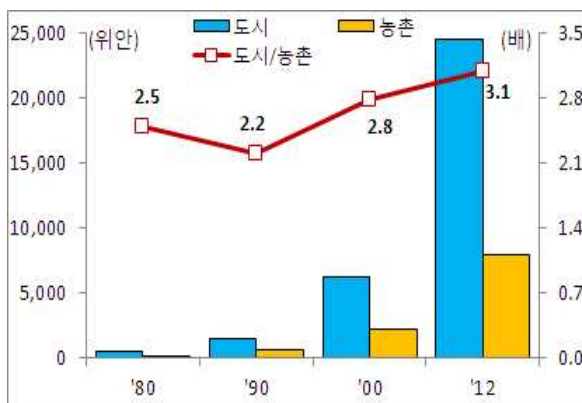
구분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지니계수	0.30	0.32	0.36	0.41	0.49	0.48	0.47

자료 : World Bank, 中國國家統計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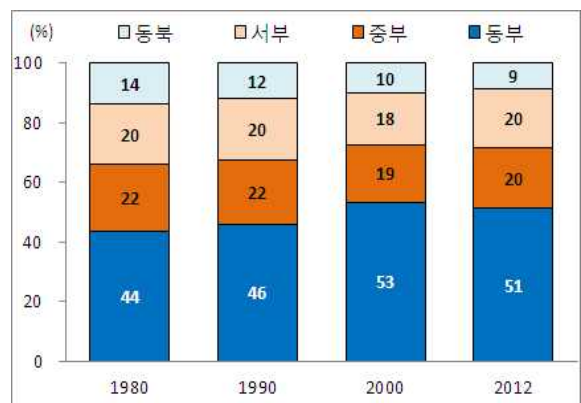
- 주 1. 지니계수란 인구통계학자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개발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균형분배로 빈부격차가 크다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0.4 이상이면 불균등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됨.
- 2. 1980~2000년까지 지니계수는 World Bank 자료, 2003~2012년까지는 중국정부 발표치 인용.

-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난 1980년 2.5배에서 2012년 3.1배로 지속 확대
 - 2012년 도시주민 1인당 소득은 24,565위안으로 농촌주민 1인당 소득 7,917위안의 3.1배로 1980년 2.5배보다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지역별로는 동부와 중서부 및 동북간 지역격차 축소 지연
 - 2012년 현재, 지역별 GRDP 비중은 동부지역 51%, 중부 20%, 서부 20%, 동북 9% 순으로, 지난 30년간 동부지역 경제 편중 양상 지속

< 중국의 도·농간 1인당 평균소득 추이 >



< 중국의 지역별 GRDP 비중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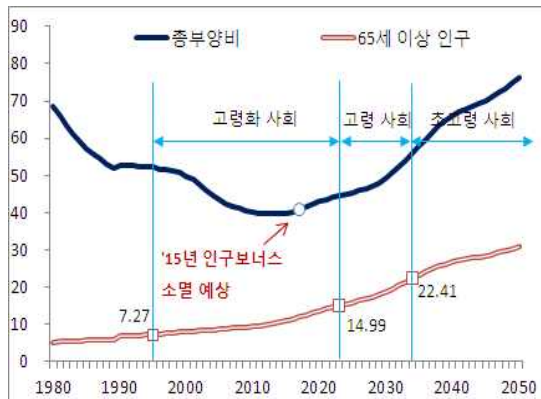
- 이에따라 지역별 산업분배와 농촌인구의 도시 호적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별 산업 분배가 일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격차 확대가 우려됨
 -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뿐 아니라 호구제도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간 소득격차 해소 모색
 - 지역별로 제조업은 전통산업, 신산업, 우위산업 간 융합하고, 서비스업은 생산형, 생활형, 신형 등 서비스업 간 융합, 신성장산업도 지역별로 선별·특화한 균형적 발전 모색⁸⁾
 - 후진타오 정부부터 추진되어온 도시 거주 농민공의 도시 호적 취득 허용 확대를 통해 노동간 소득격차 해소 추진
 - 하지만, 신성장산업 등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서 일부 도시가 대다수 분야에 중복되어 있어 향후 지역격차 확대 우려 상존

8) 노수연, “중국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비교: 4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2012.11. 참조

⑥ 인구보너스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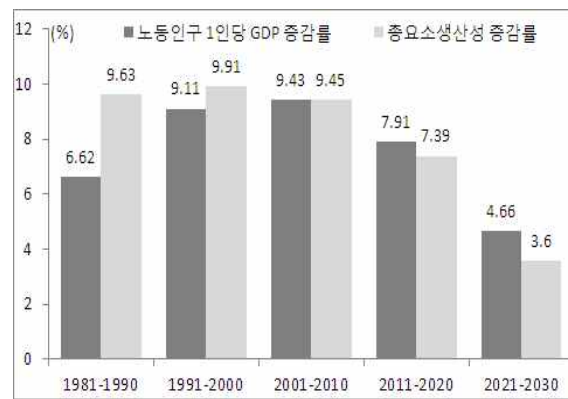
- 중국 경제는 향후 2015년부터 '인구보너스' 시대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 잠재력 감소에 따른 중진국 함정⁹⁾으로 추락할 우려 상존
 - 중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인구부양비가 반등¹⁰⁾하여 사실상 '인구 보너스' 가 소멸되는 루이스 터닝포인트¹¹⁾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사회과학원 노동연구소 차이광 소장은 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인구부양비 반등을 경험하면서, 인구 보너스가 빠르게 소멸될 것으로 전망
 -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뤄왔던 중국 경제가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중진국 함정 진입 우려도 확대
 - 중국의 노동인구 1인당 GDP 증감률은 2001-2010년 9.43%까지 상승하다 2011-2020년에는 7.91%로 급락 전망
 - 더욱이 총요소생산성은 1991-2000년에 9.91%에서 2001-2010년에 9.45%로 하락한 후 2011-2020년에는 7.3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고령화¹²⁾ 전망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감률 전망 >



자료 : 日本經濟団体連合會 21世紀政策研究會(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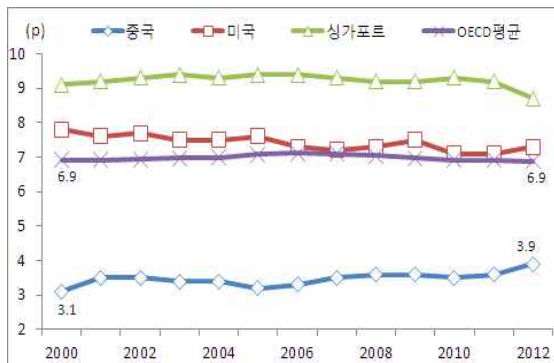
9)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이루다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0~10000달러 사이에 도달했을 때, 장기간 성장기 둔화되는 현상.
 10) 인구부양비는 인구보너스의 대리변수로 피부양인구(0-14세+65세 이상 인구)/부양가능인구(15-64세 인구)X100으로 구함. 통상 인구부양비 반등은 인구보너스의 소멸시작을 의미.
 11) 루이스 터닝포인트(Lewisian turning point)란 197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더 루이스(Sir W. Arthur Lewis)가 제기한 개념으로 개도국에서 농촌 잉여노동력 감소로 임금이 급등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
 12) UN에 따르면, 총인구중 65세 이상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은 고령 사

- 최근 중국정부는 지난 1979년부터 도입된 ‘한자녀 정책’을 2016년부터 산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나, 향후 생산성 향상은 제한적일 전망
- 중국정부는 2014~2015년까지 ‘부부 한쪽 독자의 두자녀 허용(單獨二胎)’ 정책 추진 예정, 2016년부터는 ‘두자녀 정책(二胎化)’ 본격화 계획
-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하락은 소폭 개선되어 GDP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⑦ 정계 및 사회 부패 만연

- 최근 고위급 부패 스캔들 발생 등 부패 만연으로 국가 청렴도 하락 지속
- 중국의 부패지수¹³⁾는 지난 10년간 OECD 평균에 크게 밀리는 실정
 - 2012년 중국의 부패지수는 3.9p로 OECD 평균 6.9p보다 절반정도 낮은 수준
 -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해도 국가 청렴도 최하위 수준
- 최근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뇌물수수 등 그동안 고위급 부패 스캔들이 확산

< 중국의 부패인식지수 추이 >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주 :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10점 만점으로 0점이 가장 부패한 수준을 나타냄.

< 중국의 역대 고위급 부패 스캔들 >

구분	직급	뇌물	형량
류즈진 (2013)	前철도부장	6,461만 위안 (119억 원)	사형집행유예
보시라이 (2012)	前충칭시 서기	2,600만 위안 (48억 원)	미정
천량위 (2006)	상하이 당서기	239만 위안 (4억 원)	18년
천시통 (1995)	베이징 당서기	55만 위안 (1.5억 원)	16년

자료 : 내외신 종합.

- 향후 중앙기율검사위원회¹⁴⁾ 강화, 5년 내에 반부패 법안 마련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한 사정 작업 강화가 예상되나, 공산당 내 서열다툼 심화가 우려됨

회(Aged Society),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정의

13)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부패지수는 세계은행, 프리덤하우스, IMD, 세계경제포럼 등 각 기관들이 기업인과 전문가들에게 실시한 공무원,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
 14)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查委员会)란 중국 공산당내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위법행위를 조사 및 감찰하는 준정부기관으로 2006년 ‘반부패공작조율소조’ 구성 권한 위임 등을 통해 반부패업무 최고 핵심기관으로 부상.

3. 종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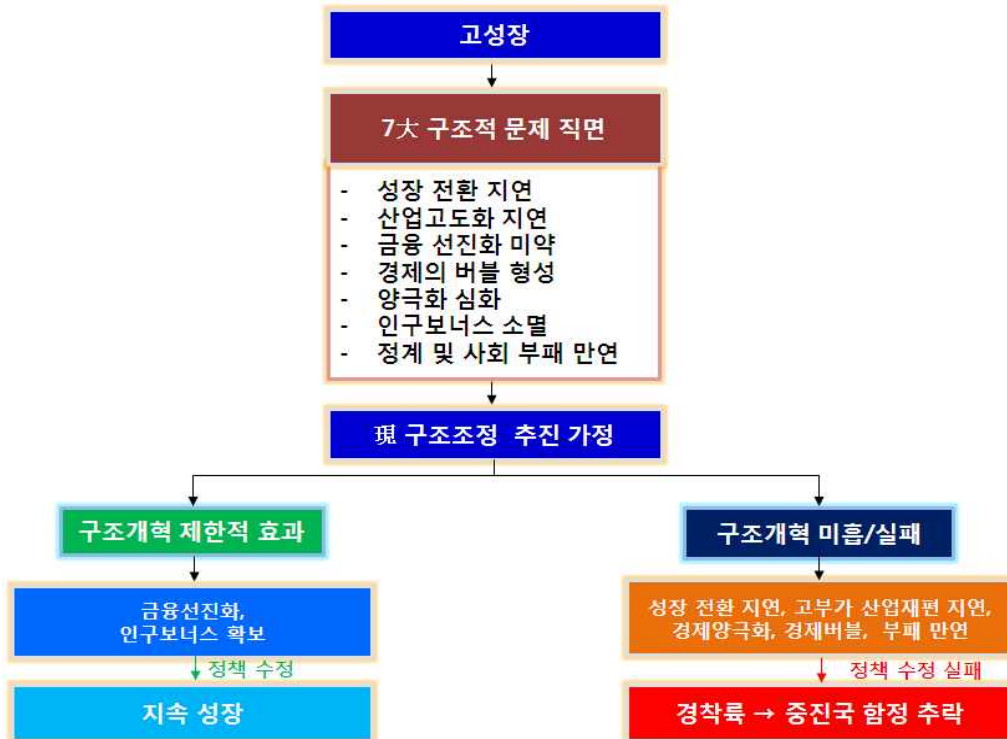
- 향후 중국경제는 성장전환, 산업 고도화, 양극화 등 7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구조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 평가됨
 - 7대 구조개혁은 기존의 정책대로 된다고 해도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금융선진화는 예금보험제도, 금융 자유화 등 중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에는 긍정적이나 단기적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더욱이 '한자녀 정책'의 규제 완화는 인구보너스 소멸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GDP 개선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더욱이 경제 버블 해소, 부패 만연 등 분야에서는 정책 실패 우려가 큼
 - 과잉 생산 업종 규제 강화, 주택 매매 제한 등 버블 억제 정책은 산업경기 둔화 초래 우려
 - 고위 공직자 부패 억제를 위해 부패법안 마련은 기대되나, 공산당 내 정파간 서열다툼으로 확산될 우려로 실패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중국의 7대 구조개혁 전망과 평가 >

구분	현안	정책 추진	전망
성장 전환	- 소비 중심 성장 지연	- 서비스업 육성 - 최저임금 지속 상향	- 소비 촉진책 미약으로 소비 진작 지연 - 투자 중심 성장 예상
산업 재편	- 고부가 산업재편 지연	- 신성장산업 육성 - 산업단지 재편 - 친환경산업 육성	- 대다수 중장기적 과제로 단기적 성과 미약 전망
금융 선진화	- 국유 은행 중심 - 가격 기재 개혁 미완 - 금융감독체제 미흡 - 금융 안전망 미비	- 자산운용상품 감독 강화 - 금융 자유화 가속 - 예금보험제도 도입	- 금융 안전망 일부 개선 기대 - 단기적 금융 자율성 확보 한계 - 금융감독기관간 마찰 심화
경제 버블	- 과잉 생산 - 부동산 버블 심화	- 과잉 투자분야 규제 강화 - 주택 차익 거래 규제	- 규제 지속으로 산업 경기 둔화 우려
경제 양극화	- 도·농간 격차 지속 - 지역간 소득 불균형 지속	- 지역별 산업 융합 - 동북, 중서부 등 낙후지역 개발(도시화) - 농민공의 도시 호적 취득 허용	- 주요사업이 일부 도시에 편중하여 지역 격차 확대 우려 - 도농간 격차 일부 해소 기대
인구보너스	- 인구보너스 소멸 직면	- '한자녀 정책' 수정	- 노동생산성 일부 개선 - GDP 상승효과 제한적
부패 만연	- 공직자 부패 만연	- 5년대 반부패 법안 준비	- 공산당 내 서열다툼 심화 초래 우려

- 더욱이 성장 전환, 산업 재편, 경제 양극화 해소 등 구조 개혁이 미흡한 분야와 경제 버블 해소, 부패 방지 등 개혁 실패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수정이 없을 경우, 경착륙 가능성 확대 우려
 - 성장 전환, 산업 재편, 경제 양극화 해소, 경제 버블 해소, 부패 방지 등 정책적 실효성이 미흡한 분야의 수정이 예상됨
 - 성장 방식을 소비중심으로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 및 업종간 산업 재편이 성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 하지만, 지나친 투자 확대는 산업 및 부동산 버블 재발이 우려되므로 소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투자, 수출을 대체해야 함
 - 하지만, 現정책 구조 개혁이 실패할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돌발 리스크 확산으로 지방정부뿐 아니라 기업 부채확대 등으로 경착륙 진입 가능성이 큼
 - 구조조정 실패는 부동산시장 붕괴에 따른 재정 부실 지방정부 파산, 부실기업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져 대규모 실업에 따른 내수 악화 우려
 -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도 증시 하락, 자금난 심화 등으로 소비, 고용, 교역 위축에 따른 외수 경기 급랭을 초래

<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예상도 >



4. 시사점

- 향후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對中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실물부문뿐 아니라 금융부문으로도 파급되어 경기 회복 지연이 우려됨
 - 중국 경기 둔화 지속으로 對中 수출 감소로 외수 경기 악화는 물론 내수 경기도 동반 약화될 가능성이 큼
 - 더욱이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내수 시장에서의 차이나 효과 감소 우려
 - 한편 중국의 돌발 리스크 출현 시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 우려
-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실패에 대비해 상시적 중국發 리스크 요인 최소화 대책 마련 필요
 - 첫째, 對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와 해외 활로 개척 시급
 - 전기기기, 자동차, 석유화학 등 對中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해외진출 보험과 무역 금융 대출제도 확대 고려
 - 주요 수출 품목의 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수출 활로 개척 필요
 - 둘째, 중국의 구조개혁 실패에 따른 중국發 돌발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
 -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중국의 돌발 리스크 발생에 따른 국내 유입 차이나머니의 대규모 유출로 야기될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외환보유고 등 외환 시장의 안전판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發 돌발 리스크에 대비해 시장의 유동성 공급 상황 상시 모니터링 필요
 - 셋째, 기업들은 중국의 성장 둔화 지속에 대비한 컨틴전시 프로그램(비상경영 프로그램)마련
 - 국가·지역별 맞춤형 전략 상품 개발, 현금경영강화 등의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넷째, 중국 현지 국내기업에 대한 중국내 자금조달 지원책 마련 필요
 - 만약 중국 경제가 경착륙될 경우, 중국 현지 국내기업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돌발 사태에 대비해 사전적 지원책 마련 필요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02-2072-6225, hzz72@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1.8	2.8	3.7	1.2	2.8	0.1	1.7	1.1	1.7
유로 지역	1.4	-0.6	-0.1	-0.2	-0.1	-0.6	-0.6	-0.3	0.3
일본	-0.6	1.9	4.8	-0.9	-3.6	1.0	2.0	3.8	2.6
중국	9.3	7.8	8.1	7.6	7.4	7.9	7.8	7.7	7.5

주 1) 2013년 연간 전망치는 IMF 2013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8월 9일	8월 1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58	2.77	0.19%p
	엔/달러	77.66	79.37	85.86	96.73	98.27	1.54¥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381	1.3264	-0.0117\$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5,426	15,112	-314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3,615	13,753	138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91	2.97	0.06%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112.2	1,118.7	6.5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880.7	1,923.9	43.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8월 9일	8월 1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106.02	107.27	1.25\$
	Dubai	104.89	92.89	107.99	103.79	106.99	3.20\$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85.38	292.45	7.0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9	3.5	3.7	2.6	1.5	2.0	2.6
	민간소비 (%)	3.1	1.7	2.4	1.2	2.2	1.7	2.1
	건설투자 (%)	-7.0	-2.6	-4.7	-1.9	-2.4	-2.2	2.5
	설비투자 (%)	9.0	-1.3	3.6	2.3	-6.1	-1.9	1.0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7	294	431	39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70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589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31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6	2.2	1.6
실업률 (평균, %)		3.8	3.0	3.4	3.5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105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